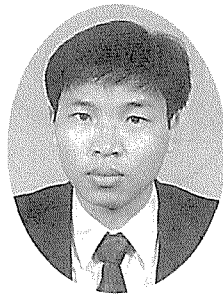


# IMF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응



조 태 형

〈 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

**지** 난 11월 21일 심각한 외화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는 IMF 긴급구제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장의 외화지급불능사태는 피하게 되었으나, 향후 IMF의 엄격한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잇단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금융기관의 신규 해외차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더욱이 10월말 이후 국제금융기관들의 차입금 상환요구가 집중됨으로써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외화지급 불능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었다.

한편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20여일이 지난 현재에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로 금

용기관들이 극히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환율 급리 증가 등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들이 크게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출입 네고시스템 마비, 기업도산 지속 등 실물부문에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원활한 자금유통과 신용질서의 안정으로 금융시장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지원, 자본시장 개방 확대,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은행도 은행 증금 증권 등 제 1, 2금융권에 모두 11조 3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IMF와의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인식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실추된 대외신인도를 회복시

키고 지원약속 자금을 신속히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이후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IMF 구조조정 방안에 따

라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가계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IMF 프로그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1% 미만으로 줄이고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억제하며

주요국별 IMF 구제금융 지원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자금지원규모 (국제금융기관 <sup>1)</sup> )	550억달러 (350억달러)	330억달러 (180억달러)	172억달러 (67억달러)	516억달러 (305억달러)	
첫 지원시기	97.12	97.10	97.8	95.1	
외채규모(연말)	1,047억달러(96)	1,089억달러(96)	830억달러(96)	1,236억달러(94)	
거시 목표	경제성장률	97년 6.1% 98년 3.0%	97년 5.0% 98년 3.0%	97년 2.5% 99년 3.5%	94년 3.1% 95년 1.5%
	경상적자 (대GDP)	97년 3.0% 98년 1.0%	97년 2.7% 98년 2.2%	97년 5.0% 98년 3.0%	94년 8.0% 95년 4.3%
	물가상승률	97년 4.3% 98년 5.0%	97년 10.0% 98년 9.0%	97년 9.5% 98년 5.0%	94년 30.0% 95년 9.0%
외환보유액 확충 <sup>2)</sup>	97년 124억달러 98년 354억달러	97년 5.9개월 98년 5.2개월	97년 4.2개월 98년 4.4개월	94년 61억달러 95년 157억달러	
재정정책	재정지출 축소 세원확대 조세감면대상 축소 공기업민영화	재정긴축, 흑자달성: GDP대비 1%(98) 국영기업 민영화 관세율 인하	재정 11.8% 감축 부과세 7→10% 인상 공기업 민영화	재정긴축, 흑자달성: GDP대비 0.5%(95) 부과세 10→15%인상 공기업 민영화	
통화신용정책(기말)	M3증가율 축소: 16.7%(97)→ 15.4%(97)→ 9.0%(98) 금리상한 철폐	본원통화 공급 축소: 35.8%(96)→ 15.8%(97)→ 7.2%(98)	본원통화 공급 축소: 12.0%(96)→ 7.3%(97)→ 10.9%(98)	본원통화 공급 축소: 600억(94)→ 100억(95) 개발은행 여신 축소	
금융산업개혁	중금 폐쇄 부실은행정리 외국인 M&A 허용 예금자보호제도 강화 건전성, 회계감독 강화	16개 부실은행 폐쇄 금융기관퇴출제도 개선 소액예금자 보호	58개 금융기관 영업정지 부실채권정리기관 신설 금융기관 외국인에 대방 건전성감독 강화	외국인 은행소유 허용 건전성, 회계감독 강화 대손충당금적립 강화 중소기업 은행차입금 상환기간 5~12년연장	
기타	자본시장 개방 확대 무역자유화 확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 차이경영 축소	독점구조 개혁	빈곤계층 배려	최저임금상승 7%억제 저소득층소득공제 확대	

주 : 1) IMF, BIS, IBRD, ADB 등      2)가용외환보유액 기준

경제성장률을 3% 이내로 운용해야 함에 따라 통화 및 재정지출의 긴축, 조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하겠다.

경비예산 절감, 영종도신공항·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투자 축소 등으로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한편, 조세감면대상 축소, 소비세·특별소비세·교통관련세 등의 세율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통화증가율이 하향조정(본원통화: 97년말 -9.5%→98년말 9.0%, M3: 97년말 15.4%→98년말 9.0%) 됨으로써 민간여신도 줄어들 것이며, 기업과 가계는 고금리의 부담에다 한계기업의 도산도 감수해야만 한다.

경제성장률 저하로 기업의 투자와 내수가 위축되어 신규고용이 감소하는 등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한편 최근의 석유류가격 인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급등으로 에너지관련 가격의 상승에다 각종 수입원자재의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등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저성장-고물가-고실업의 부담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가 취약한 금융체질과 대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에서 비롯된 만큼 부실채권 감축 및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다. 부실금융기관은 폐쇄되거나 인수·합병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생존가능성이 있는 부실금융기관도 구조조정이나 자본확충을 통해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회계 및 정보공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은행 및 증권업 진출도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OECD 가입과 함께 마련되었던 자본자유화 일정도 앞당겨져 이미 외국인주식투자 한도가 50%로 확대(12.11일) 되고 중장기 보증·

무보증 회사채시장도 개방(12.12일) 되어 당장 부족한 외화의 유입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향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확대되어 국내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경제가 국제금융환경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불어 자기자본의 3배 이상을 외부차입으로 충당하고 상호지급보증 등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 온 대기업의 경영방식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이 대폭 축소되고 결합채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며, 지배대주주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는 한편, 급격한 내수위축으로 매출액도 대폭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사업분야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업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차입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하거나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 기업들은 임직원 급여 삭감 등 경비절감, 투자 동결, 일부업종 매각 등 초긴축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분야의 투자 감축이 예상되는 데다 국책사업 축소 등으로 건설경기도 부진할 것이며, 아울러 기업간 인수합병 등 산업구조 개편도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석유제품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가격이 급등한 데다 내수부진 및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국내외의 투자축소가 불가피하며, 각종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인력의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등 무역관련 규제조치가 보다 빠르게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국산품과 수입품간의 경쟁관계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조기해제시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의 잠식 등 국내 생산기업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와 아울러 대량실업 대비 및 노동력의 재배치를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확충도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이러한 경제안정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사태의 심각성이 경제주체 모두의 행동양태를 크게 변화시키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듯하다. 이는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 금융권, 일부 기업 등 구조개혁을 실제 담당하거나 개혁의 대상이 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경제주체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행동양식을 빠르게 변화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경제의 위축, 연쇄도산 및 대량실업으로 물고갈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 스스로 추진해 왔던 구조개혁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데다 이미 추진중인 과제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실제 IMF가 요구한 경제안정화 및 구조개혁은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인 고비용·저효율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MF의 요구를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 성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일시 해결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근본적 치유 없이는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경제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당면한 경제난의 실상과 IMF 자금 지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난국을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경제주체의 행동양태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실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재정지출 절감, 합리적 예산 집행, 과시성행사 자제, 공공부문 축소 등 경제난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량해고로 늘어날 실업자의 구제를 위해 실업보험의 확대, 노동력 재배치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그 동안의 차입의존적 외형확대 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내실있는 경영기반을 다지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수익성이 없는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투자지출을 축소하며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절감하는 한편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을 보다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수부진 극복을 위해 수출가격 인하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가계는 물가불안 및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근검절약과 소비의 합리화·건전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저축 증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폐품 재활용 등을 생활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절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언론도 우리 경제의 약점과 강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감없이 보도하여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이나 낙관을 불식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